

교육 동향

| 엄 준 용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jyum94@krivet.re.kr)

▣ 정책 동향

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인적자원 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 2005 시범사업 확정·발표 |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15일 산업자원부, 노동부와 공동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uman Resources Developer) 인증제도” 2005년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확정·발표하였다.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초로 도입되는 정부 인증으로, 기업 등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에서 능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채용·관리하고, 재직중 학습을 통해 개인의 능력을 제고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이 우수한 기업 및 단체·공공기관에 심사를 통해 정부가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05년도 시범사업 운영은 심사·인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맡게 되고, 신청한 40개기업(대기업 10개, 중소기업 30개)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 인증여부를 확정하며, 11월에 인증을 받게 되는 우수기업을 확정·발표하게 된다.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게 되는 기업은 대학과의 인력교류, 연구협력 등 행 재정 지원사업인 '100개 기업 산학 네트워크 혁신 사업' 등 산학협력사업의 대상기업으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고, 정부 정책과정, 예산사업에 참여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Sector Council)의 회원 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 심사결과 인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에게는 3개 부처가 공동으로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사업을 통하여 인사관리와 교육훈련 시스템의 구축을 지원하고, 노동부의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인적자원개발 컨설팅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은 인적자원관리와 인적자원개발 등 2개 영역(1천점 만점)에서 500점 이상 획득한 기업이 받게 되며(영역별 200점 이상), 인적자원관리 영역에서는 인력채용, 전환배치, 승진, 보상 등 인사관리 전반에서 능력중심 원칙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 인적자원개발 영역에서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아울러

경력개발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인프라, 기획, 운영, 평가와 피드백 등 평생학습이 우수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개인은 재직 중 양질의 교육·훈련 서비스 활용을 통해 전생애에 걸쳐 중단없는 능력개발과 경력개발을 하고, 소속 기업에 대한 책임과 참여를 제고하며, 기업은 인적자원개발 투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양질의 노동인력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교육인적자원부,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방안' 발표 |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10일,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을 포함한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현행 획일적, 공급자 위주의 평가체제로는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는 국제수준의 고등교육평가체제를 조기에 구축해 나가는 한편, 평가과정에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방안

개선방안에 따르면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현재의 획일적인 고등교육평가 기준 및 방법 등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대학 유형별, 규모별 다양한 평가기준 마련으로 대학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는 한편, OECD, RAND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 기준에 적합한 질적 평가(CLA)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 국제수준의 평가 총괄·조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학, 의학 등 민간의 학문분야별 평가기구의 적극적 육성을 통해 학문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부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비효과적 평가체제의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평가 총괄기구의 설립을 통해 대학의 평가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육수요자의 평가 참여를 확대하고, 평가 결과와 정부 행·재정 지원을 연계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고등교육평가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학 유형별, 규모별 다양한 평가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국제기준에 적합한 질적 평가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등교육평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의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들을 총괄하기 위해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을 추진할 방침이다.

•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교육인적자원부는 특히 ‘(가칭)한국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 현재 대학교육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의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평가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칭)한국고등교육평가원’은 정부뿐만 아니라 대학으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된 사회적 공신력 있는 기구로 설립되며, 이를 위해, 평가원에 경제·사회단체, 대학 총·학장협의회 등 각 분야의 대표성 있는 인사로 독립적 이사회를 구성하며, 국내외 최고 수준의 평가전문가 영입을 통해 핵심 Project Manager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수준의 평가기관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NURI, 특성화사업 등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 중인 사업과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타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추진 일정

교육인적자원부는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가칭)’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 오는 8월 국회에 제출해 9월 정기국회에 상정기로 했다. 법률에는 평가의 목적·국가 등의 고등교육 질 제고 노력의무 등 규정, 고등교육평가원의 설립근거·운영·재정, 평가 종류 및 절차, 외부 평가전문기구 인증 등 평가 수행 방식, 평가결과의 공개, 정부 행·재정지원과의 연계 등 활용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올 하반기 중 고등교육평가원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관마련, 전문가 채용, 대학평가모형 개발 등을 거쳐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른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 예고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학부모 등의 학교선택 및 평가에 신속·정확하게 반영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학교육의 질(質)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을 따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대학정보공시제는 2004년 8월 시안 발표 후, 12월 28일 확정된 『대학구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학교는 교원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재정현황, 교원의 연구 및 교육 등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학교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거나 용이하게 해당 정보에 접근·열람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공시 항목(안)제5조의2 제1항 》

1. 학교조직 및 전공설치현황에 관한 정보
2.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에 관한 정보

3. 학생 모집, 등록, 재학 및 졸업에 관한 정보
4. 취업 및 학생 진로에 관한 정보
5. 학사운영에 관한 정보
6.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
7. 대학발전 계획 또는 특성화 전략에 관한 정보
8. 교원의 연구, 교육 및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
9. 도서관 등 연구지원시설이나 제도에 관한 정보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대학정보공시제

정부는 대학정보공시제가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의 학교 선택,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여건 개선 및 특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개별학교가 공시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시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 대학 평가시 가장 큰 걸림들은 정보의 부족이었으나, 대학정보공시제의 시행을 통하여 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이 대학에 대한 다양한 정보에 근거하여 학교를 선택할 수 있고, 대학들은 교육·연구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대학간 경쟁을 통하여 교육 및 연구여건을 향상과 특성화에 노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Ⅰ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방안 등 논의

정부는 5월 19일, 2005년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을 협의하였다.

•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계획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의 개편은 우리 경제가 자본과 노동 중심의 요소투입형 성장에서 한계에 도달하였고, 경제력의 차이가 교육기회 및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기존 인력의 생산성도 저하되어 성장잠재력이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에서 추진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 혁신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며, 인적자본을 성장엔진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모형의 정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계와 노동계 대표 및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수요자측의 요구를 인적자원개발 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국가인적자원개발추진체제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현행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 위원회로 확대·개편하고,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 혁신본부를 설치하여 사무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는 정부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사업을 조사·분석·평가하며, 관련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설정, 중복 여부 등 조정을 통해 각 부처 인적자원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연계성을 높이고,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일을 담당하게 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정책과제들에 대해 범정부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게 된다.

- IT, BT 등 첨단분야 고급인력 양성
- 의학·법률·경영·물류 등 고급 전문 서비스 분야 인력 양성
-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직업교육훈련 체제 혁신
- 중·고령자 인적자원개발
- 군 인적자원개발
-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인적자원개발 등

아울러,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적자원혁신본부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설치하여 사무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국가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개편방안’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안’은 6월 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방안

또한, 대학특성화가 대학 경쟁력의 관건이라는 인식하에 ‘특성화를 위한 대학혁신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대학의 특성화는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수준별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첫째, 대학원 수준의 고급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미래 유망 선도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연구인력 연간 2만명을 ‘선택’과 ‘집중’ 원칙이 보다 강화된 제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양성하고, 고급 전문서비스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며, 경제고도화에 따라 국제수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경영(MBA)·금융·물류 분야의 전문대학원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수요에 탄력적으로 부응하는 중견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NURI 사업을 통해 지방대학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방대학을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대학 대상의 특성화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산업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주도할 실무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하고,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 특성화고교를 2010년까지 200개교로 확대할 예정이다.

대학혁신방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문분야별 전문평가기관에 의한 평

대학특성화

대학의 특성화는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분야별·수준별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인증, 대학정보공시제의 도입 등을 통하여 대학에 경쟁시스템을 마련하여 대학의 자율적인 특성화와 구조개혁을 유도하고, 부처간 대학재정 지원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간 협력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산업·직업·학력별 인력수급 전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력수급 전망 정보를 대학에 제공하여 자율적인 구조개혁을 유도할 계획이고, 권역별 거점 대학 중심 산학협력단(TLO) 컨소시엄(15개)을 구성하고, 컨소시엄 연계에 의한 전국 단위 산학 연계 프로그램인 'Connect Korea'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직업교육 및 산학협력 동향

| 교육혁신위원회,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발표 |

교육혁신위원회는 5월 12일, 국정과제회의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보고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하여 직업교육체제를 일대 혁신하기로 하였다.

그간 교육혁신위원회는 「직업교육체제 혁신」을 교육혁신 로드맵의 한 과제로 확정하고,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 TF팀을 구성(2004. 10. 1)하여, 실업고·전문대 등 현장방문과 교육기관·관계부처·경제단체·NGO 등의 의견 수렴, 교원·학생·학부모·산업체 등 설문조사, 기획예산처, 국립대 입학처(과)장 등과의 관련기관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마련하였다.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중등단계의 직업교육 혁신

단계적으로는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와 일반 실업고교로 차별 육성한다. 산업수요와 직결되는 '명문특성화고교'를 확대하고, 기존의 실업고는 기초적인 직업교육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산업체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실업고 개편 및 계열별 육성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통합형고교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직업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교원의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며, 특성화고교의 경우 경영능력이 탁월한 대내외 우수 인력에 교장 문호를 확대할 방침이다.

• 고등단계 직업교육 혁신

근로자·성인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전문대·대학의 지역사회 계속교육센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전문대 또는 대학에 설치된 직업훈련과정에 고용보험기금 지원을 확대해 2010년까지 약 10만명의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산업체 참여에 의한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하여 실업고-

직업교육 체제 혁신방안
중등단계에서는 실업계고교를 특성화고교와 일반 실업고교로 차별 육성하고, 통합형 고교제도의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고등교육단계에서는 전문대·대학의 계속교육센터역할 강화, '실업고-전문대 협약학과 제도' 도입, 산업체-지역대학 간 '산업기술교육단지' 육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문대의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의 체계적인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산업체-(전문)대학을 연계한 '산업기술교육단지'를 육성할 예정이다.

• 직능인 우대를 통한 직업교육 유인체제 구축

내년부터 실업고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국립대 입학시 입학정원의 3% 선발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졸업후 직업세계로 원활한 진입을 위한 창업·취업 지원, 지방 공무원 특별임용제도를 활성화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집행계획을 세우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중소기업청,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프로그램 지원 발표 |

중소기업청은 6월 2일, 5월 말로 마감한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에 274개 기업과 1,138명의 공고생들이 지원했으며, 서울 18개사, 대전 15개사 등 전국 각지에서 274개 기업이 참여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능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공고를 통한 기능인력양성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지난달 5월 11일 서울의 은곡공고를 비롯한 전국 17개 공고를 시범공고로 선정한 바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직업교육체제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양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지난 1990년도 8%인 공고생 대학진학률이 2004년에는 62%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33%가 인력부족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전략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직업교육 체제의 개편 필요성이 대두돼 왔는데 이번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공업고와 기업의 상호간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올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는 이 사업은 기업이 부담해야 할 신규직원 훈련을 정부가 공고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훈련시켜주고 졸업과 동시에 기업에 채용되며 기업이 원하는 기능인력을 추가적 훈련 없이 채용하게 함으로서 기업의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훈련기간 동안 기업의 예비근로자 자격으로 1년 학자금에 해당하는 훈련비용(120~15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고 졸업과 동시에 2년간 업체에 근무하게 된다.

향후 시범공고와 신청기업간의 훈련협약체결을 통해 2학기부터는 훈련이 시작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교과과정편성을 위한 기본메뉴얼 제작도 추진할 계획이다.

맞춤형 인력양성

'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은 공업고와 기업의 상호간 필요성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주는 제도로 올 시범사업이 성공할 경우 확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 교육-산자-노동부,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 확정·발표 |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는 5월 10일 산업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산학협력형 다차원적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대학원, 4년제 대학, 2년제 대학(전문/기능대), 실업고를 포함하는 '총체적 인력양성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을 확정·발표하였다.

이 사업은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업자원부가 최초의 부처공동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는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제1기 산학협력 확산사업)에 노동부가 신규로 참여하고, 지원대상도 4년제 대학에서 대학원, 2년제 대학 및 실업고로 확대하며, 금년에는 차세대 성장동력분야의 기간인력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성장동력분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인력수요부처인 산업자원부와 공급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 노동부가 공동 참여함에 따라 인력수급 양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산업계 수요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기업 중심의 협의체인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가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점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노동부가 공동으로 총 862억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대학원 등 5개 세부사업을 지원한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아래와 같다.

첫째, 산학협력중심대학은 금년에 신규 '중심대학' 선정을 하지 않고, 작년 선정된 13개 대학에 대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며 둘째, 최우수 실험실(Lab of Excellency)은 전국 대상의 수월성에 따라 우수 실험실을 선정하여 관련분야 업체와의 공동기술개발 및 인력양성을 지원한다. 셋째, 산학협력중심 전문대학, 성장동력특성화대학 사업은 지역전략산업 및 성장동력분야 중간 엔지니어 양성을 위해 2년제 전문/기능대 중심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넷째, 산학협력 우수실업고 사업은 이 공계 자질 보유인력의 조기 육성을 위하여 금년에 20개 시범학교를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교육훈련혁신센터는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주관으로 해당 업종에서 긴요한 분야의 인력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들 3개 부처는 이 사업을 통해 연간 2만 5천명의 인력이 동 사업에 참여하고, 2005~2008년까지 총 4년 동안 3만 여명의 산업현장 밀착형 인력이 산업계로 배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기관간 연계, 산업수요에 적합한 교육·훈련 체계를 통해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가 구축되고, 장기적으로는 선택과 집중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학협력확산사업

제2기 산학협력확산사업은 3개부처 공동참여에 따른 정책의 효과성 증대가 예상되고, 산업별 인적자원개발 협의체의 참여도 특징적이다.

이 사업을 통하여 4년 간 약 3만 여명의 산업현장 밀착형 인력이 양성·배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산학협력 인력양성 체계의 구축,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촉진의 효과를 거둘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비 동향

|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교육비, 전년과 비슷한 수준 |

2005년도 1/4분기 도시근로자 소비지출 총액은 218만7천원, 가구당 평균교육비는 30만2천원, 가구당 월평균 총소비지출 대비 교육비 지출은 13.8%로 나타났다. 2005년 1/4분기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각각 218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가 증가한 반면 교육비 지출은 0.1%가 감소하여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월평균 교육비는 같은 기간 동안 30만3천원에서 30만2천원으로 1천원이 감소,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월평균 총소비지출 중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8%로서 전년 동기의 14.4%보다 0.6%p 감소하였다.

〈표1〉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 총액 대비 교육비 지출 변화 추이

(단위: 천원, %)

	2003년				2004년				200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소비지출 총액	1,950	1,869	1,940	1,932	2,107	1,931	2,040	1,995	2,187
교육비 지출	255(13.1)	184(9.8)	270(13.9)	187(9.7)	303(14.4)	184(9.5)	276(13.5)	180(9.0)	302(13.8)
증가율	-3.3	14.0	11.1	20.0	18.3	0.0	2.5	-3.4	-0.1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2005년 1/4분기 전국 가구의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각각 218만7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가 증가한 반면 교육비 지출은 0.1% 감소하였다.

| 교육비 내역별 지출, 보충교육비만 소폭 증가 |

전년 동기 대비 교육비 내역별 지출액은 보충교육비(학원·개인교습·인터넷과외 등)만이 14만원으로 2.1%가 증가,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으로 나타났으며, 납입금과 함께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납입금과 문방구비는 각각 1.3%, 5.4%씩 감소하였고, 교재비(교과서 및 참고서)가 7.3% 감소하여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가구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 내역 추이

(단위: 천원, %)

	2003 1/4			2004 1/4			2005 1/4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금액	구성비	증가율
교육비 총액	255.9	100.0	-3.3	302.6	100.0	18.3	302.3	100.0	-0.1
- 납입금	112.7	37.3	-17.8	145.9	48.2	29.5	144.0	44.0	-1.3
- 교재비	21.0	6.9	-34.7	14.2	4.7	-32.4	13.2	8.2	-7.3
- 보충교육비	117.6	38.9	29.1	138.0	45.6	17.4	140.9	45.9	2.1
- 문방구	4.6	1.5	9.6	4.5	1.5	-2.1	3.8	1.8	-5.4

주: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

보충교육비는 교육비 지출 내역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 동기 대비 유일하게 증가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근로자 가구는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감소 |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근로자 가구가 증가한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감소한 것이 특징이다.

근로자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 31만2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가 증가하였으며, 사무직 가구와 생산직 가구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2%,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28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가 감소하였으며, 자영자 가구와 무직 가구가 각각 4.8%, 13.1%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와 대조를 이뤘다.

무직 가구의 월평균 교육비는 2003년 1/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상승해 2004년 1/4분기까지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2004년 2/4분기 이후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번 분기에도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근로자 가구가 증가한 반면 근로자 외 가구는 감소한 것이 특징이며, 전체 가구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인 것은 무직가구이다.

〈표3〉 가구당 직종별 월평균 교육비 지출

(단위: 천원, %)

	2003년				2004년				2005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증가율
전가구 평균	255.9	183.8	269.6	186.7	302.6	183.9	276.4	180.3	302.3	-0.1
근로자 가구	257.0	184.9	256.6	183.8	296.7	186.2	268.9	180.5	312.4	5.2
사무직	322.7	248.9	323.7	253.5	378.2	258.6	340.5	257.3	394.1	4.2
생산직	202.5	133.2	202.8	128.5	232.0	128.8	212.0	120.6	246.9	6.4
근로자외 가구	254.3	182.3	287.6	190.9	310.5	180.6	286.8	180.0	288.8	-7.0
자영자	309.4	217.3	335.3	225.8	355.2	219.5	338.8	216.8	338.3	-4.8
무 직	126.8	101.6	177.1	105.6	205.9	85.0	166.0	91.7	178.9	-13.1

주: 1) *전가구평균≠근로자 가구+근로자외 가구, 근로자가구≠사무직+생산직, 근로자외≠자영자+무직* 인 이유는 각 직종별 가구에 대한 가구수, 지역 등의 종합가중치 적용에서 기인하는 것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통계청, 「가계조사」 DB(<http://kosis.nso.go.kr/>).